

중견국 외교 협력방안 모색: 한국과 호주 중심

김우상 (연세대학교 교수)

21세기 대한민국 외교의 3대 전략적 중심축(strategic triad)으로 중견국 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다자주의체제에서 호주와 몇몇 ASEAN 중견국과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에 끊임없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중견국은 지역체제에서 중요한 이해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력,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다자주의체제에서 도덕적, 인도주의적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 국가이다. 대한민국이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바탕으로 다자주의체제에서 중견국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을 길러야 한다.

지구촌에서 세계경제위기, 지구온난화 등의 문제, 아시아지역에서 중국의 급부상,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위협에 직면해 있는 대한민국은 한미동맹, 한중 경제 협력동반자 관계와 더불어 다자주의체제에서 중견국 외교를 통해 21세기 초반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한미동맹이 한중관계를 더욱 대등하게 하고, 한중 경제협력 관계가 한미동맹을 더욱 대등하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뜻을 같이하는' 몇몇 중견국이 협력하여 펼치는 중견국 외교는 한미, 한중관계를 더욱 대등하게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보완재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G20 정상회담, 기후변화 회의 등에서 호주와 협력하여 성과를 냈던 것처럼 중견국 외교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목 차

1. 21세기 대한민국 중견국 외교
2. 중견국 외교
 - 가. 중견국 개념
 - 나. 중견국 역할
 - 다. 중추적 동반자 개념
3. 중견국 대한민국
 - 가. 중견국 외교: 대한민국의 3대 전략 중심축의 하나
 - 나. 대한민국의 중추적 동반자 외교
4. 한·호 중견국 협력
 - 가. 한·호 관계 현황
 - 나. 한·호 중견국 외교 협력방안 모색

1. 21세기 대한민국 중견국 외교

- 대한민국은 세계 15대 경제대국, 군사력 수준에서도 세계 10대 강국임. 그러나 주변 4강에 둘러싸인 채,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변 4강 외교, 국제무대에서 북한과 경쟁하는 외교, 북핵문제와 관련된 외교에 다분히 치우쳐 있었음.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외교지평을 넓히려는 시도가 있었고, ‘신아시아 외교’에 바탕을 둔 아세안국가연합(ASEAN), 호주, 인도 등과의 관계개선 노력은 벌써 성과를 내고 있음.
- 기후변화, 녹색성장과 지속적 발전, 세계경제위기, 해적퇴치와 해상 수송로 보호, 자연재해, 평화유지 등 인간안보 문제에 중견국 외교(middle power diplomacy)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함.
- 대한민국은 2010년 11월에 G20 정상회담 의장국으로써 G20 정상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함. 자유무역 기조 유지, 지속적 발전, 정부 간 재정 및 금융정책 긴밀 협조 등의 아젠다와 회원국이 아닌 중견국 및 약소국들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며 G20에서 중견국 리더십을 발휘함.
- 기후변화 아젠다에서 2009년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non-Annex I’ 국가로써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평상시 보다 30% 낮게 줄일 계획을 자발적으로 선언함. 국제적 차원의 녹색성장 연구소(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를 설립함.
- 2011년 11월 부산에서 세계개발원조총회를 개최하여 효율적 공적개발원조(ODA)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를 주도함. 대한민국 정부의 이러한 적극적 중견국 외교는 국제무대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지지를 얻기 시작함.
- 21세기 대한민국의 외교 3대 전략적 중심축(strategic triad)으로 중견국 외교의 중요성 인식해야 함. 다자주의체제에서 호주와 몇몇 ASEAN 회원국과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에 끊임없는 노력이 필수적임.
- 한·호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며 최근 한국과 호주의 중견국 협력과 국제무대에서의 리더십 발휘는 주목할만함. 이러한 중견국 외교 리더십 발휘를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역량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함.

2. 중견국 외교

가. 중견국 개념

- 중견국(middle power)에 관한 개념은 뚜렷하게 정의되지 않은 채, 학자들이 필요에 따라 중견국에 관한 정의(definition)를 내리고 특정 국가를 중견국이라고 설명하는 정도의 수준에 그침.
- 현실주의, 신현실주의는 강대국들만을 주요 행위자로 간주함. 신자유주의는 국가뿐 아니라 다국적기업, NGO, 국제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들도 국제체제 내에서 중요한 행위자라고 가정하지만, 중견국이나 약소국에 관한 이론의 개발에 무관심함.
- 오르겐스키(A.F.K. Organski)는 1958년 자신의 저서 ‘World Politics’에서 중견국을 강대국, 약소국 등과 구별하여 설명함.
- 중견국으로 가장 많이 오르내린 나라들은 대표적으로 호주와 캐나다이고, 그 외에 북유럽과 베네룩스지역에서 스웨덴, 네덜란드, 아프리카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중남미지역에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아시아지역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한민국, 유럽에서 폴란드, 그리고 터키 정도임.
- 오르겐스키에 의하면 중견국은 강대국처럼 국제체제 전반에 걸친 군사투사력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지역 차원에서 동원할 수 있는 국력을 갖추고 있거나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로 즉, 경제력과 군사력을 포함하는 역량과 지정학적인 위치임. 이는 중견국 카테고리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음.
-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중견국 개념의 핵심은 국가의 ‘외교 스타일’에 달려있음. 즉, 다자주의 외교를 통해서, ‘뜻을 같이하는(like-minded)’ 여러 국가들과 연합하여 관심 있는 국제적 이슈를 선점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국가의 행위와 의지는 중견국 카테고리의 충분조건임.
- 중견국의 ‘필요-충분’ 조건은 첫째, 지역체제에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보유, 또는 경제력을

중견국 개념의 핵심은 국가의 ‘외교 스타일’에 달려있음. 즉, 다자주의 외교를 통해서, ‘뜻을 같이하는(like-minded)’ 여러 국가들과 연합하여 관심 있는 국제적 이슈를 선점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국가의 행위와 의지는 중견국 카테고리의 충분조건임

**중견국은 국제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나름대로의 외교
스타일 또는
외교정책이 있어야
하고, 자국의 역량에
맞는 몇 개의 적절한
이슈를 전략적으로
선점하여 적정
외교력을 투자하는
‘특화 외교’ 즉,
‘니치 외교(niche
diplomacy)’가
바람직함**

보유하고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거나, 또는 경제력은 없지만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 상당한 군사력을 갖춘 국가임. 둘째, 다자주의체제에서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연합하여 국제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는 외교에 적극 관여하는 의지와 행태를 보여주는 국가임.

나. 중견국 역할

- 중견국은 국제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나름대로의 외교 스타일 또는 외교정책이 있어야 함. 지구촌을 위한 도덕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책임감을 스스로 지녀야 함. 그러한 자국의 고유한 외교비전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국제적 규범을 만들고 지키는 데 적극 동참해야 함.
- ‘뜻을 같이하는’ 국가 간 다자주의체제를 주도하는 역량을 제공하는 촉매(catalyst) 역할을 함. 특정 아젠다를 개발하고 회의를 준비하고 다자주의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촉진자(facilitator) 역할을 함. 셋째, 지역기구를 설립하고 사무국을 운영하는 데 앞장서는 매니저의 역할을 함. 넷째, 역내 분쟁의 소지가 있는 문제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재자 역할을 맡을 수 있어야 함.
- 중견국 외교는 자국의 국가이익을 전혀 무시하는 외교가 아님. 몇몇 중견국이 협력하여 주도한 국제적 규범이나 국제레짐은 중견국에 유리한 형태로 유지될 수 있고, 이러한 국제적 규범들이 많이 생길수록 국제거버넌스 체제에서 중견국은 강대국과 유사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음. 이타적 중견국 외교로 인해 자국의 소프트 파워가 더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음.
- 자국의 역량에 맞는 몇 개의 적절한 이슈를 전략적으로 선점하여 적정 외교력을 투자하는 ‘특화 외교’ 즉, ‘니치 외교(niche diplomacy)’가 바람직함.

다. 중추적 동반자 개념

- 다자주의체제에서 중견국 외교가 중요하듯이, 동북아시아에서 중추적 동반자 외교가 중요함. 중추적 동반자 외교 또는 중추적 중견국 외교는 대한민국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영향력에 둘러싸여 있

는 동북아시아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서 주변 강대국 들로부터 중요한 파트너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에 바탕을 두고 있음.

- 중추적 동반자 외교는 라이커(William Riker)의 ‘규모의 원칙(size principle)’을 활용하여 발전시킨 아이디어임. 라이커는 ‘정치연합이론’에서 체제 내 행위자들이 연합을 형성할 때, 그 연합의 규모는 승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인 ‘최소승자연합(minimum winning coalition)’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함.
- 연합이 형성과정에서 최소승자연합보다 규모가 더 크거나 작은 연합이 만일 형성된다 하더라도 곧 와해되어 최소승자연합이 이루어질 때까지 연합형성과정이 계속됨. ‘중추적 동반자’ 역할은 승자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한 행위자의 역할을 지칭함. 즉, 최소승자연합을 형성하기 위해서 특정 행위자를 그 연합에 포함시켜야만 하는 필요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행위자는 중추적 동반자의 입장에 놓이게 됨. 중추적 동반자는 승자연합에 참여하는 다른 행위자들보다 세력기반이 작다고 하더라도 연합에 참여하는 다른 행위자들만큼이나 연합의 일원으로서 가치를 인정함. 그래서 승자연합의 다른 일원들이 요구하는 만큼의 지위와 대우를 요구함.

중추적 동반자 외교는 라이커(William Riker)의 ‘규모의 원칙’을 활용하여 발전시킨 아이디어임. ‘중추적 동반자’ 역할은 승자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한 행위자의 역할을 지칭함. 중추적 동반자는 승자연합에 참여하는 다른 행위자들보다 세력기반이 작다고 하더라도 연합에 참여하는 다른 행위자들만큼이나 연합의 일원으로서 가치를 인정함

3. 중견국 대한민국

- 로버트슨(Jeffrey Robertson)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경우 빠른 경제성장으로 1980년대 후반에 경제력 측면에서 중견국의 범주에 포함됨. 그러나 1990년대 후반에 와서야 중견국 외교 역량을 발휘하기 시작함. 주변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채 ‘뜻을 같이하는’ 나라들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외교적으로 가까이 교류할 수 있는 연결고리도 없었던 대한민국이 1990년대 말부터 적극적으로 아시아 지역 다자주의체제에 참여하기 시작함. 평화유지, 환경문제, 개발협력과 같은 인간안보 문제에 관심을 표명함. 남북한 간 분쟁 문제를 타협적으로 해결하려는 전형적인 중견국 외교 스타일을 보여주기 시작했다고 지적함.
- 대한민국은 세계 15대 경제대국, 군사력 수준에서도 세계 10대 강국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외교지평을 넓히기 시작했고, 아세안국가연합

**아·태 다자체제에서
중견국과 협력하여
미국, 중국의 일방적
행위를 견제하기
위해서도
다자체제에서의
중견국 외교는
대한민국의 3대
전략적 중심축
(strategic triad)
중 하나임**

(ASEAN), 호주, 인도 등과의 관계개선 노력은 벌써 성과를 내고 있음.

- 세계경제위기, 기후변화, 녹색성장과 지속적 발전,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해적퇴치와 해상수송로 보호, 평화유지 등 인간안보 문제에 중견국 외교(middle power diplomacy)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함. 2010년 G20 정상회담, 2011년 세계개발원조총회의 성공적 개최 및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예정 등은 대표적 예시임.

가. 중견국 외교: 대한민국의 3대 전략 중심축의 하나

- 한반도 통일과정을 겪게 될 때 국제여론의 강력한 지지를 확보해야 함.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정권에 대한 전쟁 억지력을 확보하고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괄적 동맹파트너인 미국에게나 전략적 경제협력 파트너인 중국에게 더욱 대등한 입장에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라도 중견국 외교를 통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수적임. 아·태 다자체제에서 중견국과 협력하여 미국, 중국의 일방적 행위를 견제하기 위해서도 다자체제에서의 중견국 외교는 대한민국의 3대 전략적 중심축(strategic triad) 중 하나임.
- 아·태지역에는 ASEAN, ASEAN+3, APEC, ARF, EAS, 한·중·일 정상회담 등 다양한 다자주의 모임들이 있음. 이러한 아·태지역 다자주의체제에서 ‘뜻을 같이하는’ 중견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함. 즉,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과 협력하여 다자체제에서 중견국 리더십 외교를 펼쳐야 함.
- 경제위기 대처방안, 재정 및 금융정책 협력,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테러리즘 척결, 해적퇴치 및 해상수송로 보호, 평화유지,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대책, 지속적 발전 등의 문제들이 논의되는 다자체제에서 대한민국은 금융정책,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지속적 발전 등 자신 있는 이슈를 선점하여 아젠다를 개발하고 회의를 주도해 나가야 함.
- 아·태지역에서 ‘가교국가’가 될 수 있는 외교역량도 길러야 함.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서 이들 간의 협력은 더욱 조장하고 갈등은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함. 비정부간 NGO 외교 및 민간 전문가 외교를 포함한 ‘트랙 II’ 다자주의 외교에서도 대한민국 전문가들이 논의를 주도하고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간 외교력도 갖추어 나가야 함.

나. 대한민국의 중추적 동반자 외교

- 아·태지역에서 ‘가교국가’ 역할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중추적 동반자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사이에서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국가로서 한국은 이들 간의 협력을 조장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외교력을 확보해야 함.
- ‘중추적 동반자 외교’ 또는 ‘중추적 중견국 외교(pivotal middle power diplomacy)’란 바로 대한민국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에 의해 좌우되는 안보환경 속에서 수동적인 완충역할이나 중립적 지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과 함께 동북아시아 내 중대한 정치경제 사안들을 해결하는데 적극 동참하는 외교를 의미함. 그러나 이는 대한민국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들과 대등한 군사력을 보유하여 이들 강대국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겨룰 수 있는 세력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님.
- 아직 대한민국은 중추적 동반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상태임. 국제정치 및 지역정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주변 강대국, 아·태지역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고 그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함. 그 나라 언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 제반 문제에 능통한 외교관, 민간 전문가, NGO 전문가, 사업가들이 많이 배출돼야 함. 그들 사회에 대한민국을 잘 아는 ‘지한파’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함.
- 한국은 가까운 장래에 국제기구, 지역기구의 본부 및 지부를 유치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 환경을 마련해야 함. 국제회의, 국제적 문화행사, 국제 수준의 스포츠 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국제컨벤션, 이벤트 행사를 주도적으로 유치하는 여건도 마련해야 함.
-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은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한반도 전체를 국립공원화, 리조트지역화할 수 있도록 새로이 개발하고 재정비하여 국토 전체를 아름다운 금수강산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임. 그래서 아시아지역 국가 지도자, 외교관, 학자, 예술가, 체육인, 주민들이 사계절마다 국제회의, 문화행사, 스포츠 이벤트 참가 목적으로 또는 단순히 여름

‘중추적 동반자 외교’ 또는 ‘중추적 중견국 외교(pivotal middle power diplomacy)’란 바로 대한민국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에 의해 좌우되는 안보환경 속에서 수동적인 완충역할이나 중립적 지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과 함께 동북아시아 내 중대한 정치경제 사안들을 해결하는데 적극 동참하는 외교를 의미함

**경제성장과 민주화,
인류보편적 가치에
근거한 대한민국
중견국 외교, 뛰어난
우리 문화를 세계
도처에 알리는
공공외교를 적극
추진해야함**

휴가를 해변에서, 가을휴가를 단풍이 만발한 계곡에서, 겨울휴가를 스키 리조트에서 즐기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만드는 것임.

- 미래 대한민국의 국제경쟁력은 소프트 파워에 있음. 보편적이고 도덕적 가치를 바탕으로 봉사하고 기여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여 지구촌의 많은 주민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소프트 파워에 바탕을 둔 중견국 외교를 대한민국 글로벌 외교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함. 우리나라가 주변국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소프트 파워 강국이 될 때, 한국의 중추적 동반자 역할의 성공적 추진 가능성은 높아짐.
- 양극화 문제를 겪고 있는 지구촌의 균형발전을 위해 개발도상국들과의 경제관계 강화, 이들 국가 출신 엘리트들에 대한 산업화 및 민주화 성공사례 교육과 같은 대학원 고등교육 과정의 제공 등 중·장기적인 개발도상국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함. 우리 경제수준에 어울리는 공적개발원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함.
- 경제성장과 민주화, 인류보편적 가치에 근거한 대한민국 중견국 외교, 뛰어난 우리 문화를 세계 도처에 알리는 공공외교를 적극 추진해야 함. 최근의 세계적인 한류 열풍이 대한민국 대중외교의 핵심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는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데 인색해서는 안 됨.

4. 한·호 중견국 협력

가. 한·호관계 현황

- 대한민국은 1961년에 호주와 수교, 올해 한·호 수교 50주년을 맞이함. 호주는 625 전쟁 시 17,000여 명이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생존,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헌신함. 특히 339명의 전사자는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영웅들임.
- 지난 50년 동안 한·호관계는 지속적 발전을 유지함. 최근 3~4년 동안 한·호관계는 사상 최대의 관계로 급상승함. 2005년 양국 교역량은 100억 달러 수준에서 2010년 270억 달러 수준으로 급상승함. 현재 대한민국은 국내에서 소비하는 지하자원의 1/3을 호주에서 수입함. 호주는 우리의 지속적 경제성장에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임. 호주로서도 한국은 자국의 3대 수출시장이자 4대 교역대상국이므로 그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음. 현재 한·호 FTA 협상도 막바지에 있음.

- 정치·외교관계에 있어서도 지난 3년간 양국 정상회담이 14차례 개최되고, 양국 정상간 전화통화도 10번 이상 진행됨. 이는 전례 없는 횡수임. 양국 정상은 G20 정상회담을 세계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정례적 ‘최상위 포럼(premier forum)’으로 만드는 데 실질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함. G8, G13, G14이 아닌, 한국, 호주가 포함된 G20 체제를 구축하여 대한민국과 호주의 과거 금융정책 개혁 등의 경험이 현재 세계경제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데 일조함. 특히, 한국과 호주 지도자의 공동의 노력으로 2010년에 G20 정상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할 수 있게 됨. 2009년 피츠버그 G20 정상회담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회의를 이명박 대통령과 케빈 러드(Kevin Rudd) 호주 총리가 공동의장을 역할을 맡아 주도함.
- 2009년 3월 한·호 정상회담 시 양국 간 ‘지구촌 안보 증진을 위한 공동성명’도 채택함. 현재 양국 간 1.5트랙 대화가 진행 중이고, ‘외교·국방장관 정례회담(2+2회담)’도 추진 예정임. 향후 다자주의체제에서 한국과 호주는 중견국 외교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임.
- 양국 간 인적교류 관계도 빠르게 변하고 있음. 현재 10만에 달하는 한국교민사회가 호주에 형성됨. 또한, 약 3,500명 정도의 유학생과 약 35,000명 정도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청년들이 호주에서 거주하고 있음. 매년 약 20만 명에 달하는 한국인 관광객이 호주를 방문함.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호주에 대한 인식은 아직 여행가고 싶은 자연환경이 좋은 아름다운 나라 정도로 인식됨.
- 호주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은 최근 들어 10만 명 정도로 늘어남. 그러나 한국에서 유학하는 호주 학생의 수는 100여명 정도 밖에 되지 않음. 호주 사회에서도 아직 대한민국을 잘 알지 못하는 실정임. 한·호 수교 50주년을 맞이해서 양국 간 인적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함. 양국 간 서로를 알리려는 공공외교, 대중외교의 노력이 절실함.

나. 한·호 중견국 외교 협력방안 모색

- 대한민국과 호주는 아·태지역에서 뿐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중견국

*지난 50년 동안
한·호관계는 지속적
발전을 유지함. 최근
3~4년 동안
한·호관계는 사상
최대의 관계로
급상승함. 호주로서도
한국은 자국의 3대
수출시장이자 4대
교역상대국이므로
그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음.
현재 한·호 FTA
협상도 막바지에
있음*

대한민국과 호주는
아·태지역에서 뿐
아니라 국제문대에서
중견국 협력을 통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최상의 파트너임.
호주와 같은 역내
중견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도덕적이고
인도주의적 가치로
지구촌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책임 있는'
중견국의 모습을
보여야 함

협력을 통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최상의 파트너임. ASEAN 중심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ASEAN 국가들 중 한두 나라와 긴밀한 협력은 오랜 시간 동안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외교 사안임. 이에 반해 호주와는 세계경제위기, 기후변화, 평화유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테러리즘, 해적퇴치 등 여러 문제에 있어서 이미 긴밀한 협력을 진행 중에 있음. 한·호 중견국 외교 협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중견국 외교 파트너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함.

- 우리나라에 호주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고 호주 인맥을 구성하는 노력, 호주 사회에 지한파가 많이 생기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함. 호주를 연구하고 호주에 접근하는 데 적어도 영어 이외의 언어 문제는 없음. 우리 정부, 학계, 재계, 시민사회단체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할 것임.
- 호주와 같은 역내 중견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도덕적이고 인도주의적 가치로 지구촌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책임 있는' 중견국의 모습을 보여야 함. 우리의 자랑스런 산업화 및 민주화 모델을 제3세계에 전수하고, 기후변화, 인권, 난민, 평화유지, 자연재해, 경제위기, 대량살상무기 확산, 테러리즘 등의 인간안보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외교 역량을 기르고, 발휘해야 함.

기획 및 감수: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고정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오은정 (제주평화연구원 인턴)

저자 약력

■ 김우상

現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 로체스터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함. 주 호주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제18대 대통령당선인 미국특사, 대통령직인수위 상임자문위원,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장, 숙명여대 교수, 텍사스 A&M 대학 교수, 스탠포드 대학 후버연구소 연구원, 한국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상임이사 등 역임.

JPI 정책포럼 현황

- 박영정 『북한에 부는 ‘한류 열풍’의 진단과 전망』(2011년 10월)
- 정상화 『2012년 위기론 진단과 한국의 대응』(2011년 10월)
- 박재선 『미국의 유대인파워』(2011년 10월)
- 마영삼 『공공외교의 현황과 우리의 정책 방향』(2011년 9월)
- 정기웅 『평창 동계올림픽과 한국 스포츠 외교: 방향성의 모색을 위한 제언』(2011년 9월)
- 김동성 『동아시아 전략적 3국 관계와 한국외교의 대응방향』(2011년 9월)
- 우준모 『다시 열리는 푸틴의 시대: 러시아 정치 전망』(2011년 8월)
- 고선규 『일본의 민주당 정치와 한일관계』(2011년 8월)
- 정지웅 『북한의 변화와 남북통일전망』(2011년 8월)
- 조태열 『한국의 ODA 정책과 선진-개도국 간 가교 역할』(2011년 7월)
- 홍현익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극동정책』(2011년 7월)
- 진행남 『신한류와 동아시아 문화 네트워크』(2011년 7월)
- 양창석 『독일 통일 교훈과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2011년 6월)
- 박동훈 『경제위기 이후 중·미관계 변화와 한반도』(2011년 6월)
- 임수호 『북·중경협 현황과 전망』(2011년 6월)
- 이기현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동맹의 동학』(2011년 5월)
- 박상현 『에너지 안보의 동학과 일본 원자사태』(2011년 5월)
- 김종선 『원자력 사고의 국제 대응체제의 강화 필요성: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2011년 5월)
- 이면우 『대지진 이후의 일본 위상과 동북아질서』(2011년 4월)
- 김병로 『한반도 통일: 비전과 전략』(2011년 4월)
- 김동성 『북한 정치경제 체제의 본질과 남북교류협력사업 방향』(2011년 4월)
- 김종섭 『미중관계의 정상화와 대만』(2011년 3월)

- 고성준 『새로운 통일 필요성 논리의 개발: 청소년 대상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2011년 3월)
- 이홍섭 『러·중 군사협력의 동향과 장래』 (2011년 3월)
- 김두진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거대기업의 역할: EU사례의 함의와 적용』 (2011년 2월)
- 염돈재 『독일통일의 쟁점과 한반도 통일에의 시사점』 (2011년 2월)
- 정영태 『서해해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방안』 (2011년 2월)
- 김태환 『21세기 신공공외교와 포럼외교』 (2011년 1월)
- 안찬일 『북한의 다각적 평화공세와 체제전환 가능성』 (2011년 1월)
- 황지환 『남북관계의 국제정치』 (2011년 1월)
- 성원웅 『러시아 극동지역의 전력공급체제와 남-북-러 전력계통 연계』 (2010년 12월)
- 고상두 『동북아 다자협력체 구축조건: 통일독일의 경험이 주는 함의』 (2010년 12월)
- 김갑식 『북한 당대표자회와 김정은 후계체제 전망』 (2010년 12월)
- 박홍영 『전후 일본 ODA 정책의 변화상: 한국에 주는 함의』 (2010년 11월)
- 최희식 『중일 첨각열도 해양영토분쟁: 평화적 관리 방식의 전환기?』 (2010년 11월)
- 김미경 『일본의 반핵평화주의와 안보현실』 (2010년 11월)
- 김수암 『탈북자의 현황 및 인권』 (2010년 10월)
- 원동욱 『중국 대외원조의 현황과 추세: ‘불량국가’ 지원과 그 시사점』 (2010년 10월)



Jeju Forum for Peace & Prosperity

Community Building in East Asia



www.jejuforum.or.kr

제주포럼 기획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제주평화연구원 (697-120)
Tel. 064-735-6532 또는 533 email. jejuforum@jpi.or.kr
homepage. www.jejuforum.or.kr

제주평화연구원은

2011년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해비치 호텔 & 리조트, 제주에서 '제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을 주관하였습니다. 제6회 제주포럼은 '새로운 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New Asia for Peace and Prosperity)' 라는 대주제 아래 평화와 안보, 경제, 경영, 환경, 문화, 여성, 의료, 도시디자인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의제를 가지고 진지한 토론과 의견 교환을 통해 새로운 국제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아시아 지역내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6회 제주포럼은 김황식 국무총리, 아로요 필리핀 전대통령, 자오치청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위원장 등 국내외 고위인사 등이 참석하여 새로운 아시아 지역협력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었고, 64개 세션에 세계 22개국에서 해당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포럼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켰으며 중국 중견기업인 100여명을 포함, 국내외저명인사 1,800여명이 참여함으로써 규모면에서도 가장 큰 회의로서 종합국제포럼으로서 면모를 갖추고 성대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제6회 제주포럼 개최식에서 공식화된 바와 같이 이제 제주포럼은 격년제 개최에서 매년 개최하기로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제주평화연구원은 **제주포럼 기획단을 발족하여 2012년 5월-6월 중 제7회 제주포럼 개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은 앞으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이 명실상부하게 국내 최대의 종합국제포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7회 제주포럼 부터는 포럼의 의제와 목적에 동의하는 국내외 기관과 단체가 세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세션을 대폭 개방할 예정입니다. **제7회 제주포럼에 대해 귀기관과 귀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제주포럼에 대해서는 포럼 공식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포럼 참가문의는 제주포럼 기획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8월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포럼 기획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97-120)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5-651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 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